

【 종합 】

“조선대 등 분규사학 4곳 임시이사 재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선대, 상지대 등 전국 4개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를 재파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대학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은 방문은 당초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던 교과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데다,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특히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보수인사 위주 선임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988년 ‘학원민주화운동’ 이후 20년동안 유지되어 온 임시이사 체제 청산은 기대해 온 조선대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조선대 등 분규 사학의 구 경영진으로 구성된 ‘전국 대학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교과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4개 대학 모두 임

교과부 관계자, 舊경영진측과 면담서 밝혀

보수인사 위주 선임 방침...조선대 강력 반발

시이사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교과부에서 진행된 이 면담에는 박성섭 전 조선대 이사,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 분규 사학 구 경영진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교과부 관계자로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가는 안건을 사분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분규 사학의 구 경영진과 학생, 교수,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 경영진이 각각 임시이사 재파견과 정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교과부의 이런 입장은 임시이사 파견 여부와 이사 선임 권한이 사분위에 있다는 사학법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 27일 특위를 갖고 조선대 정이사 전환을 위해 교과부에 다음달 3일까지 정이사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교과부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

상인 6명 이상의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임시이사 재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가 사분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부와 사분위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교과부가 임시이사 재파견을 추진했지만 보수인사 중심으로 추진할 지는 몰랐다”며 “조선대 구성원으로서의 강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규사학의 학생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임시이사 파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 권한임에도 교과부가 사분위가 결정할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월권을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경영진에게 사학이 돌아간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시 설

대학가 등록금 ‘동결’ 선언 더 확산돼야

대학가의 내년도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의한 뒤 동참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의 하강으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성신여대와 상지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동신대와 광주여대가 등록금 동결 및 인상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남대, 목포대 등 국립대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가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등록금 수준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았다. 대학들이 해마다 등록

금을 경쟁하듯 올리는 바람에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빈말이 아니게 됐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너무 높다. 사립대 평균 의존도가 55.4%에 달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곳도 적지 않다. 반면 재단 전입금이나 장학금은 ‘취괴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선 학부모나 학생들의 등골이 휘어질 수밖에 없다. 등록금이 국민가계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경제적 고통 부담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들은 실물경제 하강이 가속화되면서 치솟는 물가와 금리, 구조조정 한파 등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는 등 암울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대학, 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깨끗한 광주천 만들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년부터 사계절 넉넉하게 물이 흐르는 광주천을 볼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정화 처리수 10만ℓ을 매일 광주천 상류에서 흘러보내 14만3천200ℓ의 유량을 유지하도록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수심이 10cm 안팎이지만, 앞으로 20~30cm까지 깊어지고 수질도 대폭 개선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광주천의 변신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다음달 마무리되면 본격화된다. 이미 수질개선을 위해 물풀 등을 심어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압펌프를 설치해 2급수로 정화한 물을 대형 송수관을 통해 상류까지 끌어올린 뒤 다시 방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징검다리, 산책로, 생태수로 등 친수공간도 마련됐다. 현재 상류 2급수, 하류 5급수인 수질도 한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광주천이 서울 양재천이나 수원천, 전주천처럼 완전히 자연 속의 하천으로 복원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빨라지고 딱딱한 강 바닥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광주천으로 흘러드는 하수관 대부분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하지 않는 ‘합류식’ 하수관이다. 적은 양의 비에도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 비가 내린 광주천에선 유해 박테리아가 기준치의 수십 배 이상 검출되기도 한다.

광주시는 하수관계를 분류식으로 바꿔 오염원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생활하수를 줄이고 환경을 정화하는 등 광주천을 살리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광주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10개기업 “광주에 600억 투자”

광주시 서울로 ‘투자설명회’ 성과가 좋다. 광주시는 28일 서울 노보텔엠베스터 호텔에서 ‘수도권 기업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블루글라스코리아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10개 기업과 600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LED 웨이퍼를 생산하는 ㈜블루글라스코리아와 LED분야의 자체발광체를 생산하는 ㈜알투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무선단말기를 생산하는 ㈜한빛시스템 등 LED,전자관련 응용제품 생산업체 10곳이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2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LED관련 광산업과 자동차, 디지털가전 업체 중점 유치를 통해 3대 주력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민선 4기 출범 이래 국내외 LED 웨이퍼를 생산하는 ㈜블루글라스코리아와 LED분야의 자체발광체를 생산하는 ㈜알투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무선단말기를 생산하는 ㈜한빛시스템 등 LED,전자관련 응용제품 생산업체 10곳이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2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LED관련 광산업과 자동차, 디지털가전 업체 중점 유치를 통해 3대 주력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민선 4기 출범 이래 국내외 LED 웨이퍼를 생산하는 ㈜블루글라스코리아와 LED분야의 자체발광체를 생산하는 ㈜알투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무선단말기를 생산하는 ㈜한빛시스템 등 LED,전자관련 응용제품 생산업체 10곳이다.

한국 8년만에 순채무국 전략

한국이 8년여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했고 단기외채 비중은 45% 수준으로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순채무국(순채권-채권-대외채무)은 -251억 달러로 지난 6월말 17억달러에 비해 268억 달러 감소했다. 순채무국이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1분기(-58억4천만 달러)이후 처음이다.

순채무국이란 2006년 1분기에 1천303억 2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작년 1분기에는 956억2천만 달러, 올해 같은 분기에는 131억6천만 달러로 줄었다. 한국이 순채무국으로 전환한 것은 9월말 3천999억9천만 달러로 223억5천만 달러 줄어든 데다 대외채무는 4천206억4천만 달러에서 4천250억9천만 달러로 44억4천만 달러 늘었기 때문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취재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선 출마 5억 기탁금

현재 “헌법 불합치”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원을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합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으려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함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현재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

전국 평균 휘발유값

ℓ당 1300원대 초읽기

전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ℓ당 1천300원대 하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전날보다 ℓ당 10.06원 떨어진 ℓ당 1천416.02원으로, ℓ당 1천3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으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이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목표공급가격을 지난주에 비해 ℓ당 약 40~50원 정도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9~30일 사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3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사와 광주 남구청이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효사랑 실천운동 공동추진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중현 남구청 홍보실장, 박영석 보건소장, 안준현 도시개발사업국장, 황이두 총무국장, 황일봉 남구청장,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김동영 논설실장, 정재현 편집부국장, 정명언 광고마케팅부장, 신정욱 광고마케팅부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효 정신 전국화·세계화 공동 노력”

본사-광주 남구청 ‘효사랑 실천’ 업무협약 체결

광주일보사와 광주시 남구청이 우리나라 전통의 효(孝) 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효 정신을 전국화·세계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쳐나가게 된다.

광주일보사와 남구청은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효사랑 실천운동 공동추진 협약식’(이하 효사랑 협약식)을 체결했다.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과 황일봉 남구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효사랑 협약서 체결에 따른 경과보고 후 협서 서명·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효사랑 협약서 체결이 이뤄지면서 양 기관간 효 사랑사업 공동추진단이 구성·운영되며, 효사랑 문화사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 효사랑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문화 예술행사를 공동 추진하며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일보사와 남구청은 효사랑 문

화사업의 전략적 확산방안과 효사랑데이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며, 효사랑 실천운동의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은 “최근 서구 사회에서는 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효 사상이 점차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동양 사회에서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효 사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남구청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는 민주·인권 뿐 아니라 효 사상도 핵심적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광주일보사와 공동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효사랑 실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해법찾기 ‘원점’

공대위 ‘철거 불허...원형 보존 전제 설계 변경’ 재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도청 별관(도청 본관에서 도의회 사이 4층 콘크리트 건물) 철거논란에 대한 해법찾기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8일 ‘시민대토론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변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대위는 이날 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과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도청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전당 부 본 설계변경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유규승 씨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있다면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철거와 보존 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문화전당 건립이 공사기간과 비용에 다소의 변화가 있다더라도 5·18의 상징적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이견이 5·18단체와 광주시민 전부의 여론인 양 왜곡하고 있다”며 추진단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의만점

- 김중두

우린 한숨 쉴 여력도 없다

개성 인력 오늘까지 완전 철수

어제 1,200명 복귀·개성 관광·경의선 중단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차단과 상주인력 감축 등을 담은 ‘12·1 조치’에 맞춰 28일 개성공단을 포함한 개성 지역 우리 측 상주인력 1천명 이상이 복귀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북경협회사사무소 관계자 9명을 포함, 약 1천 200명(개성관광객 제외)이 복귀할 예정이다. 1천200명 중에는 개성공단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잔류 대상으로 구분돼 다음 주 중 다시 임박하는 인력이 섞여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이날 복귀하지 않는 나머지 철수 대상자들은 전원 29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당국은 12월1일 이후에 허용할 개성공단 기업과 관

리위의 상주인원수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김효연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관련 인원 4천168명 중 1천 500~1천700명 정도는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에 상주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류 허가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으로부터 체류 허가 통보를 받은 인원 중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37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개성 관광객 216명은 이날 오전 마지막 관광길에 나섰다. 작년 12월5일 시작된 개성관광은 이날 일정을 마치면 총 11만1천770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채 잠정 중단된다. /연합뉴스